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점검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후속조치계획

2005. 7. 5

산 업 자 원 부
정 보 통 신 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후속조치계획

(산업자원부)

목 차

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주요내용	1
II. 회의이후 동향과 평가	2
III. 후속조치 추진계획	4
IV. 향후 조치계획	14

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주요내용

보고내용

- 산자부 :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3대목표 9대과제 보고

< 3대목표 9대과제 >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확보 체계 구축
① 성과공유제 확산	④ 개방적 거래관계 확산	⑦ 협력우수사례 확산
② 기술·인력 교류 촉진	⑤ 중소기업 전문화·대형화	⑧ 업종별 상생협력 추진
③ 자본참여 확대	⑥ 부품소재중핵기업 육성	⑨ 대기업 설비투자 확대

- 전경련 : 대·중소기업 협력기금 조성 등 상생협력대책 보고
- 업계 : 포스코, 삼성전자, 유성기업 등 3개사의 협력사례 발표

대통령님 지시말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은,
 - ① 정부정책보다 시장에서 기업간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가능
 - ② 경쟁력을 확보하는 틀안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방식이 필요
 - ③ 상호신뢰가 확보되어야 효율성 높은 협력 가능
- 성공사례의 보편성을 최대한 뽑아내서 정착화하고, 활용 결과를 검증하고 실적도 내면서 추진
- 이를 위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시스템을 점검하고,
 - 정부는 내부회의를 통해 금번 회의결과를 점검하고 연말에 대·중소기업인과 함께 진행상황을 확인

Ⅱ. 회의이후 동향과 평가

1. 각계 동향

주요 대기업의 후속조치 (참고1)

- 4대그룹은 구조조정본부 주관으로 관계사별 협력시스템 점검
삼 성 성과공유제 및 휴면특허 이전사업에 적극 참여
현대차 450개 협력업체 수요조사를 거쳐 대책 수립·시행
L G 협력업체 전담조직 신설 및 네트워크론 도입
S K 그룹차원에서 3대 상생원칙 9대 실천과제 마련
- 포스코, 한전, GS 등 여타그룹과 공기업도 협력업체 지원 확대

업종단체·경제단체의 후속조치

- 철강·조선업계간 상생협약, 디지털전자·기계산업 상생 방안 등 업종단체도 구체적인 상생협력사업 추진
- 전경련은 대기업의 출연으로 대·중소기업 협력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7월중 대·중소기업 협력센터 설치 예정

정부의 후속조치

-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6.3, 산자부장관 주재)를 통해 그룹차원의 중소기업 협력시스템 점검과 지원확대 당부
- 경기, 충청, 경남, 부산 등 상반기중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협력포럼 개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의 25개 세부실천과제중 11개과제를 추진하고, 14개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2. 평 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정부정책의 시의적절성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과 시장에서 높이 평가
 - 또한, 5월16일 회의 이후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
 - 중소기업들도 최근 대기업들이 발표한 지원계획이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개선(조사업체의 77%)되고 있다고 평가
 -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 **(참고2)**
- 그러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
 - 사업부별 실적평가방식 등으로 현업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추진되는 등 대기업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 일부 문제사례 >
 - 일부 대기업이 현금결제시 어음할인률을 제하고 지급
 - CEO는 휴면특허 이전을 강조하지만 현업담당자는 참여에 수동적
 -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세부설계도면을 다른업체에 넘겨 제품화
 -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기업의 이윤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적, 정책적 인센티브도 부족

< 종합평가 >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동 추세가 현업부서까지 확산되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적 인센티브도 대폭 확충할 필요

Ⅲ. 후속조치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오래된 기업관행과 인식을 바꾸는 정책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상생협력정책은 여타 중소기업정책보다 중소기업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 중소기업 정책자금(연간 5조원)은 4대그룹 중소기업 구매물량(연간 120조원 이상)의 4%에 불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참여정부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정착해 나갈 필요
- 금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계속 이슈화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면서, 상생협력추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
 - 이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수립한 상생협력 3대목표 9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대 기업** 내부 협력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내외 모범사례 도입
 - 중소기업** 자체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자립능력을 제고
 - 정 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 제도정비 및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 특히, 정책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

2. 상생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연말까지 상생협력관련 제도정비, 입법조치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각종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추진

(1) 대기업이 주도하는 상생협력

① 성과공유제 확산

□ 금년중 공기업에 시범적으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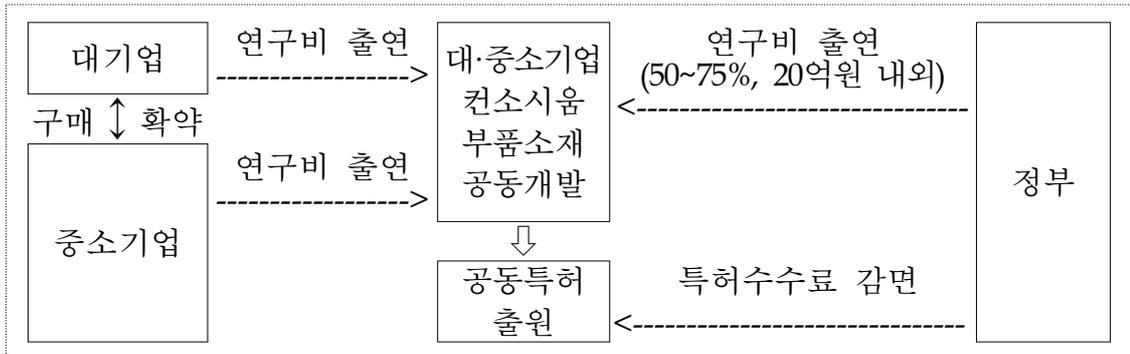
- 지난 6월 성과공유제 확산본부를 생산성본부에 설치
 - 성과공유모델 및 성과공유표준계약서 개발,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전담인력 교육, 홍보 등 수행
 - * 본부장의 4~5명으로 전담인력 확보
- 10월까지 성과공유모델 및 표준성과계약서 개발 완료
- 하반기중 한전에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시범실시
 - 한전에 성과공유제 전담조직을 설치('05.8)하고 하반기중 전력그룹사별로 성과공유제 시범도입

□ 내년부터 대기업에 본격 확산

- SK, KT 등 주요 대기업에 성과공유제 확산
 -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비·R&D 투자자금 융자 지원 (금리 4.4%,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확산본부를 통해 대기업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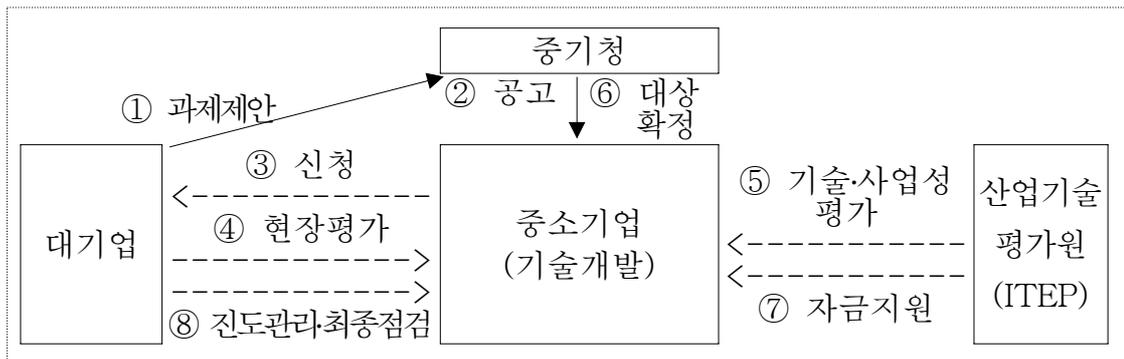
② 대·중소기업간 기술·인력 교류 촉진

□ 대·중소기업간 부품·소재 공동개발을 대폭 확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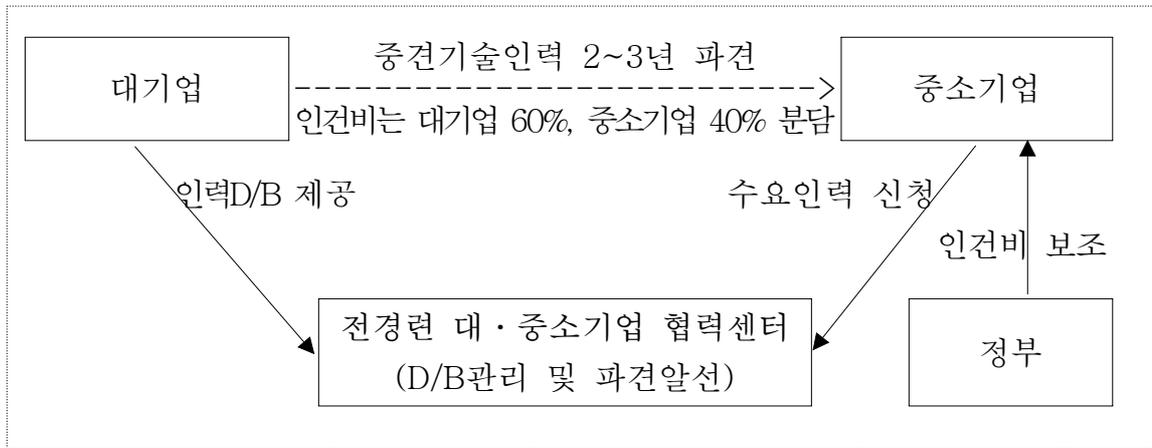
- 금년에는 일체형샤시모듈, 무선통신복합모듈 등 69개과제 지원예정 (부품소재기술개발예산 1,600억원중 1,000억원 배정)
- '06년 20개과제 신규발주를 위하여 관련예산 대폭 증액 추진
- 공동개발한 기술을 공동으로 특허출원시 특허료 50% 감면
* 현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출원한 경우 비감면 처리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대기업으로 확대 시행



-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구매하고 협력회사가 개발하는 신제품에 대해 정부가 2억원 한도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현재 공공기관은 국방부, 철도공사 등 15개기관이 참여
* ('02) 9억원 → ('03) 40억원 → ('04) 40억원 → ('05) 100억원
 -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LG전자 등 7개 대기업 참여예정
* 참여기업: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삼성중공업, 금호타이어, 두산엔진, 효성중공업

□ 중소기업에 대기업의 중견기술인력을 지원하여 기술전수



- 대기업의 10년이상 근속 중견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2~3년간 파견하고 인건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
 - 비협력회사 파견을 전제로 중소기업 부담인건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하반기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용보험기금 지원 근거 마련 (노동부)

□ 대기업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

- 대기업 보유특허중 이전가능 휴면특허는 20% 수준
 - * 10년 보유특허의 경우 연간 약 62만원의 연차등록료를 부담
- 하반기부터 기술거래소에 휴면특허 D/B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이전
 - * 중소기업의 97%가 대기업 휴면특허 도입의사를 표명
-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기술거래소에 위탁하여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동안 발생하는 특허유지비용을 감면

③ 자본참여 확대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출자 확대 유도

- 소유와 경영 분리를 전제로 지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 벤처·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출총제 기완화 (30% 미만→50% 미만)
 - 하반기중 전경련·벤처협회 공동으로 지분투자 애로사항 조사
 - * 투자저해요인, 외국계자금 유입동향, 정책과제 등 중점검토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투자펀드 결성 지원
 - 기추진중인 「LG전자 대·중소기업협력펀드(250억원규모)」의 성과를 보아가며 추가펀드 조성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

□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

- 대기업과 구매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유동화증권** 발행(연말까지 2천8백억원 조성)
- 반도체, 기계 등 10개업종의 유망중소기업 **100여개사**에 **20~50억원**의 투자자금을 지원
- 신용등급에 따른 지원조건 차등화, 발행업체 및 주간사의 위험공유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참고3)**

□ 납품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자금 조기지원 (재경부)

-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네트워크론 도입
 - * '05.5월말 현재 총 19개 시중은행중 신보 17개, 기보 15개 은행과 협약체결
- 금년중 **800개** 구매기업과 **5천개** 납품기업이 네트워크론을 활용토록 유도
 - * '05.5월말 현재 464개 모기업의 4,061개 협력업체에 총 5,858억원 지원

(2)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① 중소기업의 대형화·전문화·글로벌화 유도

- 중소기업의 대형화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간 M&A 활성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유망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부문의 산업구조조정 유도
 - 내년초 산업발전법을 개정, 창업투자회사 등과 동일하게 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 허용
 - 다만, 부실 및 부실징후기업 인수 등 목적사업 외에는 다른 PEF와 동일하게 세제혜택 적용 배제
 - 200억원 규모의 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여 CRC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동을 지원

-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신속히 전환하기 위한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계획을 하반기중 수립
 - 중견기업연합회·한민족벤처네트워크(INKE)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

- 6월 출범한 KOTRA 종합기동지원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75개국 102개 해외무역관에 “기동서비스반” 설치, 운영중
 -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
 - * 시장개척단 : (‘04) 658회 → (‘05) 674회
 - * 해외전시회 : (‘04) 722회 → (‘05) 798회

②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1.17일 대통령님께 보고한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에서 중핵기업 육성전략을 핵심목표로 제시한 이후,
 -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핵기업 146개를 도출하고 이의 업종별 특성 등을 잠정 분석
 - 화학, 자동차, 전자 업종순으로 중핵기업이 분포하고 있으며 기계는 7개 업체에 불과
 - 매출액 기준으로 2천~3천억원대의 중간층이 취약
 - * 중핵기업 : 모듈 단위 부품을 자체 개발·생산하고 독자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한 규모(매출 2천억원, 수출 1억불)를 갖춘 기업

대 책

- 중핵기업의 업종별, 기업특성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부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세부지원 시책 마련
 - 지원효과가 높은 5대분야(M&A, R&D, 자금, 네트워킹, 세계 지원)별로 T/F팀을 구성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중
- 금년 8월까지 세부지원시책 수립을 완료하는 즉시 본격 지원에 나서 2010년까지 중핵기업 300개 육성
 - 중핵기업 육성 목표 : ('05) 146개 → ('08) 200개 → ('10) 300개

(3) 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

□ 산업연구원을 통해 대기업의 협력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

— < 주요 내용 > —

- 대기업이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
- 계량적 지표개발로 협력관계 발전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대기업의 협력시스템 평가 및 협력우수기업 선정
- 공공조달 참여 대기업의 하도급계획 평가
- 대·중소기업 협력관련 D/B 구축

□ 협력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범부처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 < 주요 내용 > —

- 협력우수기업에 대한 공정위 하도급 서면조사 면제 (공정위)
- 공공조달 적격성 심사시 협력우수기업 우대 (조달청)
- 대·중소기업 협력대상의 포상규모와 훈격 확대 (행자부)

□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독려

- 분기별로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간담회」 개최
- 연말에 대통령님 주재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 금년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 주요 내용 > —

- 대·중소기업 협력에 장애가 되는 불요불급한 규제 완화
- 일정규모이상 공공조달시 하도급계획서 징구 의무화
 - * 국가계약법보다 특별법 형태의 상생협력촉진법에 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
- 조달, 금융 등 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 협력우수기업 선정 및 평가관련규정

3. 추가 협력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확산
 - 최근 윤리경영, 투명경영,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가 경쟁력 핵심요소로 부상
 - * 미 엔론사는 '01년 회계부정사건 이후 가장 존경받지 못한 기업으로 전락
 - * 독일의 폴크스바겐사는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아우토비전 프로젝트 추진
 - CSR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발적인 이행 유도
 - 현재 진행중인 CSR 국제표준안 제정에 적극 참여
 - 기업들이 CSR 관련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 CSR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 확충
-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업을 통한 환경기술을 중소기업에 전수 (Green-Partnership 구축)
 - * 삼성전자 : 협력업체와 친환경제품을 공동개발, 450억원 수입대체
 - * LG전자 : 1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분석관리기법 전수
- 설계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쏠 제조과정을 대기업이 IT인프라를 활용, 실시간으로 지원 (i-매뉴팩처링)
 - * 금년중 금형분야 시범실시후 내년부터 자동차부품, 디지털전자 등으로 확대
- 대기업의 우수훈련시설을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훈련 시설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에 교육훈련기회 부여 (노동부)
 - 훈련시설 운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 * ('04) 30개 → ('05) 40개 → ('08) 60개이상
 - * 신규 채용자 양성훈련 및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시설 및 장비비(연간 15억원 범위), 인건비의 80%(4인까지), 홍보비(연 3천만원), 훈련비 등을 지원

4. 상생협력 모범사례(Best Practice)의 확산

□ 국내외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공기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산

※ 국내 주요모범사례 : ①한전의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자회사
평가시스템, ②포스코의 성과공유제, ③풍진아이디 협력업체들이
앞장서 부도난 모기업의 회생을 지원한 사례

※ 해외 주요모범사례 : ①폴크스바겐의 아우토비전 프로젝트 ②
도요타의 동반자적 상생협력관계 (참고4)

□ 언론을 적극 활용하여 대기업의 변화와 개혁을 유도
(국정홍보처와 협조)

① 연말까지 상생협력 기획시리즈 연재 지원

* 한겨레신문 “양극화를 넘어 동반성장의 길”, 매일경제신문 “아름다운
동행” 등에 이은 후속기획시리즈 지원

②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상생협력분위기 확산

* KBS 「신화창조의 비밀」 등 기업관련 방송프로그램에 상생협력
우수사례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도록 협력

③ 대·중소기업 협력정책의 체계적 홍보

* 주요정책에 대한 적기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정책홍보 강화

□ 향후 전체 상생협력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적
기사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의 조치

※ 5월16일 행사후 보도된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사례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특허분쟁 등으로 상생협력대책과는 무관

< 주요 문제보도 >

- LG텔레콤-서오텔레콤 특허분쟁 (한겨레신문 '05.6.2)
- 알티전자(삼성전자 부품업체) 특허분쟁 (한겨레신문 '05.6.2)
- 한전-거화금속 실용신안 분쟁 (한겨레신문 '05.6.10) (참고5)

IV. 향후 조치계획

□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 주요과제는 정책품질관리를 통해 추진상황 중점관리
 -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휴면특허 이전, 대기업 중견인력의 중소기업 지원, 수급기업투자펀드 등 5개사업
-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은 연말까지 조치완료
 - 지분투자 활성화 방안,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계획,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계획 등 3개사업
- 법령 제·개정이나 예산수반 사항은 연말까지 조치완료

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산업발전법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예산

성과공유제·협력평가 인프라 구축,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 대기업 중견인력 중소기업 파견 등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분기별로 정책과제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에 대통령님 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종합평가

< 건의사항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 국회의원, 8월중 상생협력 우수기업 방문 예정
- ◇ 연말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협력대상」을 친수하시어 협력우수기업을 격려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참고 1

주요 대기업과 업종단체의 후속조치현황

□ 7대그룹의 후속조치

<p>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제, 휴면특허 이전 등 기추진 협력사업의 내실운영 · '05년부터 삼성전자 33개업체, SDI 70개업체와 성과공유제 시행예정 · '05년중 147건의 휴면특허 매각 추진중 · 네트워크론 지원, 상생협력추진상설조직 운영, 인력·기술지원 등
<p>현대 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협력업체 공동으로 상생협력추진위원회 구성(5.20) - 450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6.11~6.21) - 협력업체 인력양성을 위한 사이버 종합교육센터 구축 예정('05.8)
<p>L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별로 기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확대 추진 · LG전자 : 자금지원 (당초 300억원→수정 500억원), 현금결제(연간 27조원) · LG필립스·LG CNS : 네트워크론 신규 도입 · LG텔레콤 : 협력업체 전담조직(PRM) 신설
<p>S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차원의 3대 상생원칙 9대 실천과제 마련(5.24) · 입찰시스템 개선, 종합평가시스템 마련, 성과보상시스템 마련 ·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결제시스템 개선, 재무지원 강화 등 - 그룹차원에서 협력업체 담당임원회의를 정례화하고 연말 실적 평가
<p>포스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 신설(6.1) - 특허·실용신안 12,500건을 중소기업에 개방 - 성과공유제 확대실시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p>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한 T/F 구성(5.23) - 자회사 경영평가지 중소기업지원 평가항목 상향조정(5점→10점) - 6개 발전자회사에 중소기업지원전담조직 설치 완료
<p>K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사 등급제」 도입을 통해 공급사 등급에 따라 차별적 관리 - 협력사 확대('04년 19개품목→'05년 28개품목) 및 성과공유제 도입 - SI사업 및 해외사업에 중소기업과 공동 진출

다음페이지에 계속

□ 여타 30대그룹의 후속조치

롯데	- 롯데마트 : 우수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운영 예정(40억원) - 롯데제과 : 생산설비의 협력업체 이양 계획중
GS	- GS칼텍스 : 협력업체교육 및 경영자 연수과정 확대운영 - GS홈쇼핑 : 네트워크론 신규 도입, 우수중소기업 납품지원
두산	- 두산중공업 : 금형강 안정공급 선언, 수급기업투자펀드 참여 - 두산엔진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
한화	- 타그룹이나 그룹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그룹전체에 전파 예정 - 협력업체 평가후 우수업체와 관계증진 및 포상 추진
주택 공사	-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중소기업 가점조항 신설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선금지급 확대(계약금액의 10~50%)

□ 업종단체

철강 · 조선	- 철강업계-조선업계간 상생협약 체결(5.26) · 후판의 공급능력 확충, 가격의 탄력적 운용 등 합의
디지털 전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토론회를 통해 협력방안 도출(6.2) · 기술개발/구매/환경/정보화/마케팅/특허 등 6개부문 협력 추진
기계	- 기계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 체결(6.28) ·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 및 대·중소기업 협력전시회 개최 합의 · 유희설비 거래알선 종합정보센터 운영 추진

※ 향후 섬유(7월), 유통(7월), 자동차(9월) 분야도 개최 예정

[본문으로 돌아가기](#)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납품업체 331개사 (중소기업 269개, 벤처기업 62개)
- 조사기간 및 방법 : '05.6.29~7.1, 인터넷·팩스를 통한 설문조사

□ 조사결과

①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최근 발표한 협력업체 지원 계획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평가

Q: 최근 대기업이 발표한 협력업체 지원계획이 과거의 지원내용과 양적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가?

→ 양적·질적개선(26%), 양적확대(51%), 불변(23%)

② 대기업들이 발표한 지원대책이 향후 장기적인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

Q: 최근 대기업들이 발표하는 상생협력방안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관계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 그렇지 않다(67%), 그렇다(33%)

③ 진정한 상생관계 형성을 위해 현업부서 평가방식 개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등을 강조

Q: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상생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복수응답)

→ 현업부서 평가시 협력업체 지원실적 반영(53%), 중소기업 스스로 역량 강화(51%), 정부의 지속적 관심(49%), 성공사례 확산(31%)

[본문으로 돌아가기](#)

참고 3**수급기업 펀드구조와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 수급기업펀드 구조



□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① 신용등급에 따라 발행금리 및 지원한도를 차등화

<지원한도 및 발행금리>

신용등급	BBB- 이상	BB+ ~ BB-	B+ 이하
지원한도	70억원	50억원	40억원
발행금리	2.00~4.00%	4.97~8.17%	6.47~9.97%

* 기술력평가 우수업체에 우대금리 적용

② 발행업체 및 주간사 등이 위험을 공유

- 발행업체가 중순위채(2%)를 인수하고, 보증기관의 전액보증이 아닌 중진공 후순위채 인수(18%) 방식으로 신용을 보장

③ 사전적으로 업체선정 단계에서 건전성 제고

- 내부통제시스템 및 윤리경영 실사결과 하위등급기업은 지원제외
- 신용평가기관(2개기관)이 신청업체에 대해 1차 예비평가지 중복 평가(cross-check)를 통해 신용평가의 정확성 확보

④ 발행 이후 사후관리 강화

- 발행초기 실사를 통해 사업계획서상 용도의 사용시 조기상환 조치
- 자산관리자(지원업체 모니터링), 보조자산관리자(자산운용) 및 회계법인(윤리경영 중간점검) 등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및 견제

[본문으로 돌아가기](#)

□ 국내사례

- 한전의 경우, 자회사 평가시 중소기업지원실적을 반영
 - 자회사의 중소기업담당 현업부서에서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효과
- 포스코의 성과공유제
 - 공급업체에 원가절감 혁신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초과달성한 경우 합의된 기준에 의해 성과를 공유 (1차년도 100%, 2차년도 50% 환원)
- 포스코, LG텔레콤, 한전 등의 중소기업지원전담조직 설치
 - 외환위기 이후 최우선적으로 구조조정되었던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다시 부활시켜 지속적인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보
- 풍진아이디의 경우, 협력업체들이 힘을 모아 모기업의 회생 지원
 -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풍진아이디는 발주업체들의 부도, 중국현지 법인의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에 봉착, 금년 1월 최종 부도처리
 - 최근 240개 협력업체가 힘을 모아 부채탕감 및 잔액의 출자 전환에 합의하여 법원이 풍진아이디의 화의신청을 인가

□ 해외사례

- 폴크스바겐의 아우토비전 프로젝트
 - 폴크스바겐 노·사와 시당국은 '99년 볼프스부르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부품업체유치, 일자리알선 등 지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하여 기획된 동 프로젝트 추진으로 6년동안 창업 200개, 기업유치 100개, 일자리 7,500개 창출
- 도요타의 동반자적 상생협력관계
 - '00~'03까지 30% 원가절감을 추진하는 CCC 21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원가절감성과의 일정부분을 부품업체에 환원
 - 도요타가 지분의 24%를 보유하고 있는 덴소(Denso)는 전체공급의 50% 이상을 도요타 이외 기업에 공급

[본문으로 돌아가기](#)

□ LG텔레콤-서오텔레콤 특허분쟁 (한겨레신문 '05.6.2)

- 서오텔레콤은 LG텔레콤이 회피설계방식으로 자사보유특허(핸드폰 비상호출 처리장치)를 침해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04.4)
- 소송과정에서 서오텔레콤의 로얄티 요구에 대해 LG텔레콤은 중소기업에 로얄티를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

□ 알티전자(삼성전자 부품업체) 특허분쟁 (한겨레신문 '05.6.2)

- 개인발명가 이한상씨는 알티전자로부터 휴대폰 개폐장치 개발을 의뢰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04.4월 특허출원
- 알티전자와 또다른 두 중소기업은 '04.6월부터 상기기술을 채택한 슬라이드 휴대폰 개폐장치를 만들어 삼성전자에 납품
- 이한상씨는 알티전자와 두 중소기업, 그리고 이씨의 설계도면을 경쟁업체에 넘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분쟁중

□ 한전-거화금속 실용신안 분쟁 (한겨레신문 '05.6.10)

- 거화금속이 보유한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한전 납품업체들을 거화금속이 고발하자 한전은 거화금속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
- 무상사용이 여의치 않자 최근 한전은 납품규격을 거화금속 제품보다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외국제품으로 변경

※ 상기내용은 보도내용을 단순 정리한 것이며, 현재 분쟁사안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임

[본문으로 돌아가기](#)

IT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정보통신부)

목 차

I. IT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필요성 및 현황	24
II. IT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25
1. 장비 분야 : 통신사업자 - IT중소 · 벤처기업	25
2. SW 분야	28
3. IT부품 분야	30
III. 기대효과	31
참고 1. IT SMERP	32
참고 2. 통신사업자-장비납품기업간 상생협력 발표	33
참고 3. 통신사업자-장비납품기업간 상생협력이행 관리지표	34

I. IT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필요성 및 현황

□ IT산업 국민경제의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주력 산업군

- GDP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29.4%**차지

* 전체수출 2,538.4억불중 IT제품은 747억불로 29.4% 차지(2004)

□ 우리 IT대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동안 대기업을 뒷받침하는 IT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은 제자리

* IT산업내 IT중소·벤처기업 생산비중은 감소 : ('00) 26.7%→('04) 25.6%

- IT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

□ 그간 IT대기업은 개발자금지원, 장비구매를 통해 IT중소·벤처기업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양을 제공

* KT, SKT 등 4개 통신사업자는 3천억원 규모의 KIF(Korea IT Fund)를 결성하여 2003년부터 유망 IT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

- 그러나, IT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구매·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존재

□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급위주 정책에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IT SMERP(참고1)를 수립·추진중

- 세부 산업군별로 54개 전문협의회를 구성하여 미시적인 맞춤형 정책을 개발·집행

* 1만 6,277 IT중소·벤처기업(전체 2만여개)의 경영현황을 DB로 구축하여 세부 산업별로 문제점, 정책 수요를 파악

- 시장원리에 의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

Ⅱ. IT대 ·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1. 장비 분야 : 통신사업자 - IT중소 · 벤처기업

□ 최근 통신서비스업의 성숙으로 통신사업자 투자규모가 줄고, 납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매 · 납품과정에서 불신이 증폭

* 기간별 성장률 : '90~'00 : 21.9%, '00~'03 : 9.6%, '03~'05 : 3.0%

* 기간통신사업자 투자추이 : ('02) 8조 18억원→('03) 6조 1,598억원→('04) 6조 2,027억원→('05 계획) 6조 4,942억원

○ 통신사업자는 저가납품을 원가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고,

○ IT중소 · 벤처기업은 사업모델(수익성, 차별성, 발전성, 시장정보)이 부실한 상태에서 유사한 기술로 시장에 진입, 출혈경쟁 자초

□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경우 IT중소 · 벤처기업의 투자여력 약화로 이어져 상품 경쟁력이 저하되고,

○ 장기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IT산업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 우려

□ 이에 정통부는 통신업계와 중소 · 벤처업계를 적극 중재하여

○ KT, SKT 등 7대 기간통신사업자와 IT중소 · 벤처기업간 저가낙찰 개선, 수요예보제 도입, 다단계 납품 근절, 현금결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생적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참고2) 발표('05. 4. 21)

가격중심의 낙찰방식 개선

- 납품기업간 출혈경쟁을 초래하였던 가격평가 위주의 저가낙찰제를 개선하여 기술력 중심의 **종합평가제** 도입
 - ⇒ 품질이 중요한 장비에 대하여 품질 기준을 **50%이상** 배점
 - * KT : 가격평가요소 대 품질평가요소를 2:8로 개선하고, 저가 입찰을 배제하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목표근접가격제 도입
 - * SKT : 기술력 위주로 공급사를 선정하는 종합 평가제 시행중
 - 1차 제안서 평가(일반 40%, 기술 60%), 2차 성능 평가후 선정
- 계약예정자의 원가산정 자료를 他업체에 넘겨 경쟁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사례 근절

수요예보제 도입

- 사전생산을 유발하는 짧은 납기기간, 수시발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VDSL 모뎀** 등 주요품목에 대해 **수요예보제**(분기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계획
 - * 데이콤 : 납기기간을 통상 8주에서 12주로 확대하고,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준비단계에서부터 업체에 통보

무상 A/S기간 단축

- 납품계약 체결시 납품업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우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무상 A/S기간 단축 등 우대방안 강구
 - * 데이콤·파워콤 : 하자율이 낮은 납품업체는 무상 A/S기간 단축(2→1년)

다단계 납품구조 개선

- **브로커**(영업전문회사)의 개입을 통한 생산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와 생산업체간 **직거래** 추진
 - * KT·KTF : 원천개발사(장비개발 및 생산사) 직접 제안제도 시행
 - * SKT·LGT·하나로·데이콤·파워콤 : 기존 직접 납품제 철저 이행

현금결제 확대

- 납품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금결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 * LGT : 현금결제 기준금액을 향상(1백만원이하→1천만원이하)
 - * KTF : 현금결제 기준금액을 향상(1천만원미만→5천만원미만)
 - * SKT, 파워콤 : 현재 모든 결제대금은 현금으로 결제중

납품기업 지원조직 운용

- 납품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처리하는 등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사업자별로 설치하고, **전담직원** 배치
 - * SKT : 파트너와 Win-win Relationship 구축을 위한 전사 총괄 조직인 BR추진팀과 별도의 중소기업 지원센터(NATE 비즈니스센터, 3G Reality Center Seoul) 운영중

향후 계획

- 공동선언에 참여한 7대 통신사업자, IT중소·벤처기업(420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한 **관리지표(참고3)**를 통해 금년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개선현황을 점검할 계획

2. SW 분야

중소SW기업 수주확대

- 중소기업 수주확대를 위해 공공SW사업에 대해 대기업 수주하한제('04. 3)를 도입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구축한 SW고충처리신고사이트에 불이행 사례 공개 등 이행을 점검하여 98%의 이행률 기록

<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수주하한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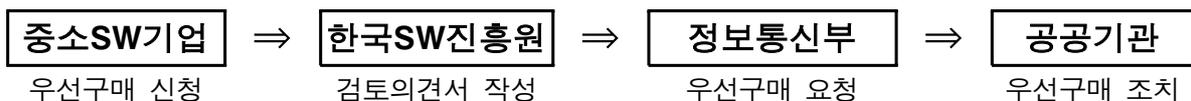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1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 2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7억원 이상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5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제24조의2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기업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 GS(Good SW)인증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05.4)

< 우선구매 절차 >



※ 현재 총 5건의 신청이 검토 후 해당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요청된 상태

- 제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GS인증제품 구매자의 책임면책 추진

상생협력 추진

- 수요 대기업과 중소SW기업간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기업이 중소 SW업체의 R&D, 마케팅 지원추진('05. 3/4분기중)

< 분야별 협의체 구성 및 협력내용 >

분야	협력주체	협력내용
SI, 패키지	SI대기업+패지지 SW업체	내부시장의 개방
임베디드 SW	제조업체+임베디드 SW개발업체	표준 및 기술 스펙 공유
디지털콘텐츠	통신/포탈업체+콘텐츠업체	콘텐츠 사용료 지불방식 개선

- 삼성 SDS 등 SI대기업들이 SW 대·중소기업 상생 펀드 (100억원대)를 조성하여 기술력있는 중소SW업체에 투자할 계획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시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수주 유도

< SW기술성 평가기준 개정('05. 7월 예정) >

- * 기술성 평가중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부문' 배점 상향 조정(10→20)
- * 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가지급 지연 방지를 위해 참여업체의 대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토록 유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시정

-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SW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보완 추진('05. 4/4분기중)
- * 하도급 내용 변경으로 추가비용이 소요시 이에 따른 대금 조정 조항 신설 등

3. IT부품 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는 기존 R&D체계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대응에 한계 노정
- IT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 초기단계부터 중소기업에 참여시키는 국책연구소, 대·중소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사 례

- ETRI-대기업(삼성, LG, 현대, 맥슨)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CDMA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나, 부품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미참여
→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휴대전화의 부품 국산화율이 70%대에 불과
- 대만은 90년대 PC산업을 배경으로 완제품 조립기업과 부품기업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위주의 IT부품산업이 급성장

추진내용

- 예산처와 협의하여 IT부품·소재 기술개발 확대('05년 383억원)
- 시스템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R&D 추진
 - 산업체 주관 과제기획제도를 도입하여 시스템 기업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 부품·소재 기업과 R&D를 공동 기획
 - 공동 R&D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을 시스템 대기업이 구매토록 유도

Ⅲ. 기대효과

- IT대 ·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상호 **Win-Win** 가능
 - 수요자인 대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협력업체를 육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이 가능
 - 공급자인 IT중소 · 벤처기업은 안정된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술개발 전념 가능

Win-Win 사례

< 통신사업자 - IT중소 · 벤처기업 상생협력 >

- LGT는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인텍웨이브와 장비개발에 착수
 - LGT는 장비규격, 특허, 인증장비 등을 제공하고, 인텍웨이브는 이를 근거로 제품개발에 전념하여 'Notch VI 중계기' 개발에 성공
 - LGT는 연간 200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하였고, 인텍웨이브는 수출을 포함하여 연 120억원의 매출을 늘리는 Win-Win 효과를 거둠

< 대 · 중소 SW기업간 동반해외진출 >

- 과테말라 교육정보화사업(2천만불)을 수주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KT와 에스필 등 중소 SI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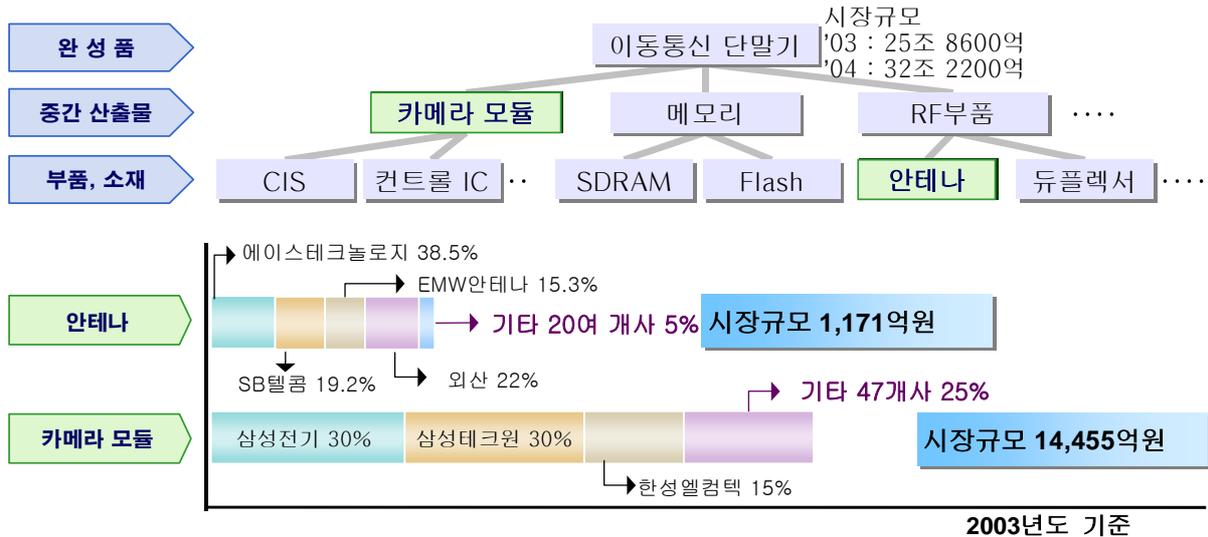
< IT제조대기업 - 부품기업간 상생협력 >

- 삼성전자와 엠텍비전, LG전자와 코아로직은 상호 협력하에 휴대폰 카메라용 칩을 공동 개발하여 상호 매출을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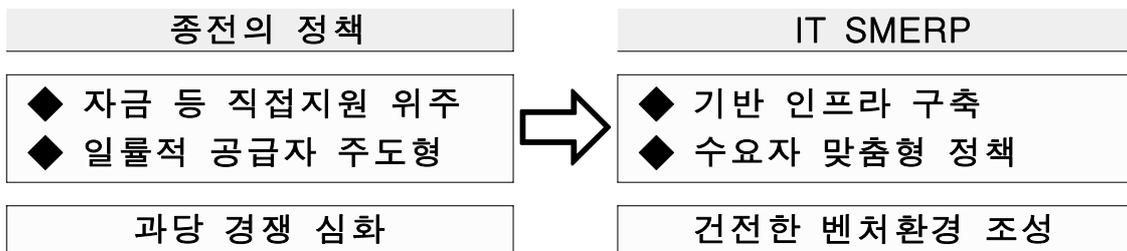
[참고 1 : IT SMERP(IT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s Revitalization Project)]

- 부실한 사업모델(수익성, 차별성, 발전성, 시장정보)에 의한 과다 진입과 구조조정 미흡으로 과당경쟁 현상이 심각

< 예시 : 이동통신단말기 >



- 업종별 전문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술력과 시장원리에 근거한 진입, 경쟁, 성장·퇴출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



< 사례 : 안테나 전문협의회를 통한 정책지원 >

- ◇ 안테나 및 EMC 측정지원센터(공통서비스)를 구축하여 우수한 기술업체의 사업비용 절감
- ◇ 산업·기술 정보 및 컨설팅 제공 등으로 취약한 경영능력 보완
- ◇ IR제공, 대기업 관행개선 등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성장 촉진
- ◇ 지속적인 전문협의회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협력문화조성으로 기업간 자율적인 구조조정 촉진

[참고 2 : 통신사업자-IT중소벤처업계간 상생협력 발표]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통신사업자, IT중소·벤처기업간
상생적 협력을 위한 공동합의서

2005. 4. 21.

통신사업자(이하):

데이콤	대표이사 사장	경홍희	<i>경홍희</i>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김신미	<i>김신미</i>
LG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남 동	<i>남 동</i>
KT	대표이사 사장	이용경	<i>이용경</i>
KTF	대표이사 사장	남중수	<i>남중수</i>
파워콤	대표이사 사장	박종승	<i>박종승</i>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윤장현	<i>윤장현</i>

IT중소·벤처업계

IT벤처기업연합회	회장	서승모	<i>서승모</i>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홍미희	<i>홍미희</i>

테이콤 SK텔레콤 LG텔레콤
KT KTF 파워콤
하나로텔레콤 IT벤처기업연합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참고 3 : 통신사업자 - IT중소·벤처기업간 상생협력 관리지표]

구분	통신사업자		IT중소벤처기업	비고
	평가항목	평가지표	설문항목	
종합 평가지 (30점)	종합평가지 실시	입찰 구매 건수 대비 시행률		목표 근접 가격 포함
	가격평가기준	기술평가 반영률 = 1-가격평가율		
	최저가 낙찰		가격 삭감 요구	
수요 예보제 (25점)	수요예보제 실시	수요예보 적용 품목수	제품 리드타임 적절성	긴급물자 수요 준비 시스템 점검
	P/O ¹⁾ 준수율	P/O 준수율	P/O 준수율	
A/S (20점)	A/S기간 유지보수비율에 특혜를 받는 우수업체 선정건수	선정회사수	선정된 회사가 느끼는 특혜의 만족도	합의내용 이행 여부
다단계 납품구조 (10점)	생산업체 직거래	직거래 품목의 고시 및 비율	직거래 품목의 고시 및 비율	
결제 (15점)	현금결제	현금결제 단축비율	현금결제 단축비율	합의내용 이행 여부 및 액수, 건수 반영
	어음결제	어음 단축 일수	어음 단축 일수	
100		70	30	

1) P/O(Purchase Order) 준수율 : 계약발주량 대비 실제 구매량

